



트럼프의 이란 발전소
폭격 연기 까닭
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지탱하기 버거워지는
미국의 패권 3면

한국군
파병 반대
4~5, 8~9면

혐오표현
규제 문제
10면

팔레스타인
11면

트럼프-네타냐후 전쟁 반대
3.29 집중 행동의 날
12, 11면



2003~2004년
이라크 전쟁과
파병 반대 운동 6~7면

트럼프-네타냐후 전쟁 규탄 행동의 날에 참가하자

관련 기사 12면
미국의 이란 전쟁 관련 기사들 2~9면

3월 29일(일) 오후 2시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

(안국역 1번 출구)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 공격을 ‘연기’한 까닭

미국 제국주의의 취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라고 이란에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정작 시한이 다가오자 한발 물러선 것은 트럼프 자신이었다.

3월 21일 토요일 트럼프는 이란이 핵심 무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타격하고 파괴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월요일 트럼프는 전쟁을 “완전하고 총체적으로 해결할 ... 생산적 대화”가 있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진척에 따라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을 5일간 미룰 것”이라고 했다.

폭 30여 킬로미터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전쟁의 초점이 됐다. 이란이나 중국과 연계된 선박들은 여전히 그 해협을 통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서방 선박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더 크게 받고 있다.

최후통첩을 보내기 불과 며칠 전, 트럼프는 군사 작전의 “점진적 축소”를 언급했다. 미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란은 전투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할 이란의 능력은 약화됐다.”

최근 트럼프는 미국은 전쟁광들의 동맹 나토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지난주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국을 도우러 오라고 나토 동맹국들에 다급하게 요청했다.

인기 없는 전쟁

그러나 트럼프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의 푸들인 영국 총리에게조차 말이다. 영국 노동당 총리 키어 스타머는 미군에 영국의 군사 기지를 제공했고, 유럽의 다른 지도자들은 “방어” 목적의 군사 지원을 제안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전쟁이 진작에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미국은 “점진적 전쟁 축소”를 바라지만 이스라엘 등이 미국에 보내는 신뢰성도 지켜야 한다

그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이 자신들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한다. 독일의 우파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라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행동에 반대했을 것이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인의 58퍼센트가 이란 전쟁에 명분이 없다고 본다. 이탈리아에서는 3분의 2가 이란 공격에 반대한다. 그 때문에 트럼프의 동맹이자 파시스트인 조르자 멜로니조차 전쟁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쟁 지지율이 겨우 28퍼센트이고(유고브 여론조사), 녹색당이 반전 정당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서방 지도자들이 인기 없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트럼프는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빠져 애타게 출구를 찾고 있다.

트럼프를 지원하는 억만장자와 대기업들은 세계적 오일 쇼크라는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유소에서 유가 상승을 체감한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걸프 연안국들은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에너지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퇴로를 확보하는 것을 막아 왔다. 또한 이란 정권은 이 싸움에 자신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안다.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적 패권이 쇠락하면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서 지역 강국들에 어느 때보다 크게 의존하게 됐다.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우방들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외에 여타 걸프 연안국들, 새 시리아 정권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그 때문에 아류 제국주의 지역 강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통제할

능력이 전보다 약해졌다는 것을 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한다. 이스라엘은 지난 2년 동안 인종학살을 자행하며 중동을 서방에 이롭게 재편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했다. 더는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는 아류 제국주의 지역 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스라엘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과거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미국의 바람을 거스르더라도 전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결국에는 자신의 중동 경비전인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임을 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이란 공격에 끌어 들일 수 있었다. 네타냐후는 이란 “정권 교체”에 혈안이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좌초시키고 싶어 했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공격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촉발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으면 더 큰 인명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전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저항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에서 한발 물러선 날, 이스라엘은 이란과 레바논에 맞서 “전투가 수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지난여름 이란과의 ‘12일 전쟁’에서 했던 방식으로 미국의 우위를 재확립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위험하고 확산 논리가 내재돼 있다.

아서 타우넨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지탱하기 버거워지는 미국의 패권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가 “제3차세계대전을 할부로”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그 할부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은 갈수록 광범한 차원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번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이 일으킨 물자 부족과 물가 상승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이번 전쟁에 관한 많은 탁월한 논평들은 군사적 역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에 비추어 현 상황을 바라보면 어떨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코스타스 라파비차스가 《뉴 레프트 리뷰》 이번 호에 기고한 “신(新) 달러 제국주의”에 관한 글이 미국 제국주의의 독특한 지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파비차스는 미국 패권의 생산 기반이 쪼그라들어 왔다고 지적한다. 1945년에 미국 경제는 세계 제조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2024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퍼센트에 육박한다. ... 반면 미국의 비중은 약 10퍼센트다.”

그럼에도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경제력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오늘날 그 형태는 금융 시스템의 우위가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라파비차스가 지적하듯 그 우위는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래 더 커져 왔다. 미국 달러화는 여전히 단연코 가장 중요한 준비 통화다. 다시 말해, 미국은 마르크스가 말한 “세계 화폐,” 즉 보편적 지불 수단의 발행자로 남아 있다.

그 지위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위

궁극적으로는 생산력이 결정적이다. 옛 “중심부” 서방 너머로 산업 생산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금융 우위와 군사력으로 패권을 뒷받침하는 데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 관리에서 한 구실로 더 강화됐다.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해 막대한 달러를 세계 금융 시스템에 쏟아부었다. 세계 금융 위기에 대응하거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처럼 세계 경제에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마다 연준은 다른 중앙은행들과 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그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추가로 끌어갈 수 있게 했다. 한편, 미국 국채는 은행들과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융통하는 거대한 대출 시장의 주요 담보물이 됐다.

이런 환경 덕분에, 규제망 바깥에서 대출을 받거나 해 주는 ‘그림자 은행’이 번창할 수 있었다. 자산운용사들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3대 자산운용사로 꼽히는 블랙록·벡가드·스테이트스트리트는 갈수록 많은 생산 자본의 지분을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은행들과 기업들은 달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덕분에 특별한 이점을 누린다. 달러에 접근하기 비교적 어려운 개발도상국 자본가들은 그만큼 불리한 처지에 있다.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강력한 유럽과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들은 “생산 능력 면에서는 미국에 맞먹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세계적 권위를 행

사하지 못하고 군사력이 이류에 머무는 현실과 상응한다.” 국제법에 의해서도 강화되는 금융 우위 덕분에 미국 정부는 버릇없이 구는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라파비차스가 설명한 이런 “새로운 패권 구조”의 또 다른 축은 미국 국방부다. “미국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세계 시장의 통합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호르무즈해협, 말라카해협, 바브엘만데브해협,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주요 인도양 항로 등의 핵심 항로를 장악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 항로들이 막히면 세계적 생산 사슬이 끊어진다.”

호르무즈해협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현재 미국은 그중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항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라파비차스가 인정하듯, “금융적 강압은 군사력보다 더 광범하게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생산력이 결정적이다. 옛 “중심부” 서방 너머로 산업 생산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위협받고 있다. 이란은 제재로 경제가 피폐해졌는데도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막아낼 수 있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로 활동했다

이란은 십중팔구 중국과 러시아(라파비차스가 미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꼽은)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 사실은 생산의 결정적 중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특히 중국은 군사와 기술 면에서 미국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여러 분석가들이 지적하듯이, 미국이 이란을 제압하는 데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면 중국의 대만 재정복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 우위가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사적 격변 속에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은 막강한 달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대안을 틀림없이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번역 이원웅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에 참전하려고 시간을 끄는 듯하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전함 파병 요구에 계속 신중 모드다.

그러나 파병을 거부할 가능성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선택지 중에 파병 거부는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트럼프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과 똑같이 반응했다. 그 때도 미국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며 “신중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결과는 트럼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아 내는 식이었다.

3월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전쟁과 파병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됐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주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당면 최대 현안인 이란 전쟁과 파병에 관해서라면 모호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자주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지는 우파의 주장을 견제하는 논리도 사용되지만, 불충분한 반박일 뿐이다.

사실 자주국방론은 한국 자본주의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동산 원유의 해상 교통로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파병으로 핵추진잠수함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가 한국 등 동맹국들에 요구한 게 바로 그것 아닌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스스로 방어에 나서라.”

결국 ‘국익’을 스스로 지키라는 것인데, 국회 내 파병 찬반파도 모두 ‘국익’을 근거로 삼고 있다.

국회 내 파병 반대파는 파병이 “명분도 실리(국익)도 없는” 일이라며 반대한다.

안철수, 조정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이 궁할 때 확실히 도움으로써 미국에게서 안보 자산(핵추진잠수함 등) 등을 제공받는 것이 ‘국익’이라고 떠든다.



정부가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은 파병 압박뿐 아니라 파병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은 80년 동안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힘입어 한국 국가의 지정학적 이익과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고, 이것을 국익으로 규정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접근법과 구조에 결코 도전하지 않는다. “중도 실용”을 기치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은 한국 지배계급의 전통적 외교·안보 노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신중하게 고심 중이라면 한국은 nato 주요국들과 일본 등 22개국의 이란 규탄 공동 성명에 동참했다. 이 성명은 이란 남부 미나브 초등학교 학살 같은 일을 번번이 자행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은 단 한 마디도 없다.

국익

물론 한국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와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한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우호적 교역국이자 중동의 주요 강국인 이란과의 관계가 적국 관계로 틀어지는 것은 부담이다.

게다가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도 전쟁 반대, 파병 반대 여론이 훨씬 큰 상황에서 지방선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으로 청년 지지층이 이반해

조기에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사례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의 주요 전쟁을 지원하는 방향이 흐트러진 적은 없다. 신중한 검토는 그저 지원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 때 미국, 영국 다음가는 규모의 군대를 보내어, 이라크 전쟁이 서방의 침략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에 도움을 줬다. 그 대신 치열한 전투 지역을 피해 부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미국과 협상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 레바논 남부에는 한국군 동맹부대가 포함된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 중이다. 그 부대는 이스라엘군을 자제시킨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그렇다.

이것만 봐도 서방과 함께하는 한국의 중동 파병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해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의 신중론은 트럼프 정부의 파병 압박에 대한 시간 벌기만이 아니다. 파병 반대 여론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또는 그런 효과를 낼 참전 방안을 마련하려는 시간 벌기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협

반전운동은 파병 가능성이 현실적이라고 보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군사 지원 일체를 반대하는 것을 구호로 삼아야 한다

력 관계를 맺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방(UAE)은 지금 걸프 연안국 중 가장 노골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

UAE는 중동 국가들 중 사상 세 번째로 2020년 이스라엘과 수교했고 이후 이스라엘과의 군사·경제 협력에 적극적이었다. 이스라엘이 한국-이스라엘-UAE 간 삼각 협력을 제안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했었다.

UAE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일부 군벌들을 지원하거나 군사 개입을 벌여 왔는데, 이런 UAE 군대를 훈련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 한국의 아크부대다.

최근 UAE는 서방 22개국 공동 성명에 동참했다. UAE가 극찬하고 추가 주문했다는 천공-Ⅱ는 미군과 정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보를 공유하며 미 공군, 육군 핵심 전력이 배치된 알다프라 기지를 방어하는 데 쓰인다.

이미 미국을 간접 지원하고 있는 한국

UAE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군에게 영공을 개방했다. 트럼프가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이 때문에 이란군이 한국이 건설한 UAE의 바라카 핵발전소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할 경우) 보복 폭격 대상으로 콕 집어 거론한 듯하다.

즉, 한국은 이미 UAE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UAE를 통해 소량의 원유를 확보한 것은 그 대가다.

미 해군 자신이 호르무즈 해협에 전함을 들여보내는 것을 꺼리는 만큼, 한국이 참전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해협에 전함을 들여보내는 형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침략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함을 파견할 가능성만 경계하거나, 국익이라는 극도로 부실하고 모순된 이념에 기초해 반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UAE와의 협력을 통한 군사 지원, 기뢰 제거 지원, 청해부대의 원래 파병 지역인 아덴만에서의 후퇴 감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 전문에 광주민주향쟁과 부마민주향쟁을 포함시키는 개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파병할 경우 진보층의 배신감을 희석시키려는 꼼수일 수 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한국 국적 유조선에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생 2명이 하선해 귀국 조치됐다. 이는 참전에 따른 안전 위험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반전운동은 파병 가능성이 현실적이라고 보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군사 지원 일체를 반대하는 것이 구호가 돼야 한다.

김문성

파병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말은 도통 믿을 수가 없다.

“공식적 파병 요청을 받은 바 없다”(국방장관)더니 “파병 요청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외교장관)고 한다.

“파병 요청에 아주 신중하게 대처”(청와대)하겠더니 어느새 “호르무즈해협을 최대한 빨리 개방한다는 [트럼프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군사동맹 나토의 회원국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렇게 온갖 모순된 말을 흘리다가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한 것은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보인 일관된 패턴이었다.

2020년 1월 호르무즈해협 파병 당시 문재인은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말을 흐렸고, 당시 외교장관 강경화는 “파병에 관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요청을 거부할 듯한 내색을 풍겼다.

그로부터 꼭 1주일 후 문재인 정부는 청해부대 파병을 발표했다. 그전까지 신중론을 내놓던 민주당은 “정부의 해결 방안을 존중하겠다”며 파병 결정을 비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이 미국의 요청과 구분되는 ‘독자 파병’이라고 했다. 얼토당토않는 변명이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란 압박에 일조하려 파병하는 것인데 그 운을 누구와 협력하겠는가. 이란과?

사실 문재인 정부는 발표 전부터 파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군은 이란을 겨냥해 청해부대에 대(對)잠수함 무기를 보강해 뒀고 대원들에게 작전 지역 변경 가능성을 공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에 파병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노무현은 미군 장갑차의 중학생 압사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청년 시위 덕에 대통령이 됐지만, 취임 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 아크부대의 UAE 파병을 연장했다. 아크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달 만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고 협력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편승하는 것이 한국 국가의 위상 제고와 한국 경제에 이로울 것(‘국익’)이라고 판단해, 국민 70퍼센트 이상이 반대한 파병을 추진했다.

노무현은 좌파와 평화 염원 대중의 분노를 피하려 온갖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했다. 파병 예정 지역이 안전하다고 거짓말하고, 선발대로 의료부대와 공병부대를 보내며 “비전투병” 파병이라고 연막을 쳤다. 그러나 막상 2004년 파병된 아이툰부대 본대는 병력의 80퍼센트가 전투병이고 예산의 90퍼센트가 무장 비용이었다. 정부는 이 부대를 “훈성 부대”라고 불렀다.

“[파병을 결정하면] 부끄러운 날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던 범여권 의원들은 노무현의 발표 후 재빨리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한 것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당시 여당 원내대표 김근태)

이후 파병과 파병 연장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때마다 반전 입장을 줄곧 고수한 여당 국회의원은 임종인 의원 한 명뿐이었다. 이후 임 의원은 당내 “왕따”로 취급받다가 떠밀리듯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노무현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고(故) 리영희 선생이 일갈했듯 “한국 정부가 아양과 아첨을 편다고 부시 정부가 전쟁을 하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연설 전문: 격주간 <다함께> 5호, ‘리영희 교수의 국회 앞 집회 연설 - 내가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종속된 것이었고, 따라서 이라크 파병과 한반도 평화는 애당초 “교환” 대상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이 ‘평화 교환’의 성과라고 자찬했지만, 대북 압박으로 인한 역내 긴장은 계속 고조됐다. 그 긴장은 결국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이어졌고, 노무현의 ‘평화 교환론’은 완전히 파산했다.

좌파와 대중의 평화 염원을 배신한 파병은 노무현 정부를 임기 초부터 위기에 빠뜨렸다. 특히 청년 지지층의 이반을 촉발했기 때문이었다(고(故) 서동만 전 국무원 기획조정실장 회고). 훗날 노무현 스스로도 자신과 자신의 당이 “민주주의·진보·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그 후에도 노무현 정부, 여당 열린우리당과 그 후신 정당들의 파병 지지는 계속됐다. 임기 말 레바논에 헤즈볼라 견제를 ‘평화 유지’로 포장한 유엔군 소속으로 동명부대를 파병했다. 야당이 되어서도 이명박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아덴만 파병(청해부대)을 지지했다.

노무현은 대선 당선 직전 “반미면 어쩌냐”는 말로 지지를 얻었다. “미국에 ‘땡큐’ 하겠다”며 트럼프에 왕관을 선물한 이재명 정부는 믿을 수 있을까?

김준호



국제 반전 운동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한국 최초의 대중적 반전 운동이 등장했다

2003~2004년

지난번 한국에서 반전운동이 분출했을 때

김광일

2003년 3월 20일,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2세가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국제적으로 대규모 반전 운동이 시작됐다.

2003년 2월 15일 60여 나라, 600여 도시에서 600만~1,0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영국 BBC 보도). 프랑스의 정치학자 도미니크 레미에의 조사를 보면, 2003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 전 세계에서 항의 시위가 3,000번 열렸고, 약 3,600만 명이 참가했다. 전례 없는 국제적 동원이었다.

한국에서는 2002년 말 대선 직전에 의정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에 항의하는 40만 명 규모 청년 시위가 벌어졌다. 여중생 압사 항의 시위의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과 우파 이회장이 당선할지도 모른다는 개혁 염원 대중의 우려가 있었다.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는 이 시위 덕에 이회장을 꺾고 당선됐다. 당시 노무현은 호기롭게 “반미면 어떡냐”며 친미 정서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개혁 염원이 더욱 커졌다.

국제 반전 운동의 분출과 이러한 한국 정치 상황 속에서 한국 최초의 대

중적 반전 운동이 등장했다. 이것은 노동자연대 전신인 ‘다함께’와 평화주의 활동가들이 쏟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2002년 10월 26일 인사동 입구에서 이라크 전쟁 반대 첫 집회가 열렸고 200여 명이 모였다. 2003년 2월 15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국제 반전 행동의 날 집회에는 수천 명이 모였다. 그 운동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에 거세게 항의했고, 2003년 3월 국회의 파병 결정을 두 차례 연기시키기도 했다.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피랍되자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작고한 서동만 전 국정원 기획조정

실장은 이라크 파병 결정이 노무현 정부를 임기 초반부터 위기에 빠뜨렸다고 회고했다. 당시 청와대 요직을 지낸 문재인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보 진영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린 첫 계기로 이라크 파병을 폄을 정도로 반전 운동의 압력은 상당했다.

민주당 정부에 대한 착각과 기대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모두 미국을 도와 파병한 전력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9·11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 첫 제물로 삼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시의 둘째 표적인 이라크에 파병했다. 이것은 민주당 정부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라크 석유 시설 건설이나 재건 사업에서 이윤을 챙기려 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국익”이었다. 노동계급에게는 차별과 억압을 가하는 자들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반전 운동에 참여한 자민통계와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를 운동의 표적으로 삼는 것을 애써 회피하려 했다. 이들은 파병에 관해서 미국의 압박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했고, 한국 자본주의의 나쁜 이익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선택한 것이라는 측면은 회피했다. 좌파 민족주의의 발로 엮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자민통계와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미국의 파병 압박을 물리치도록 노무현 정부를 돕는다는 관점으로 반전 운동을 이끌려 했다. 그래서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과의 공조를 중시하며 국회에서 파병 결정을 무산시키는 데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러나 당시 여당은 파병을 거부하지 않았다. 국회가 파병을 두고 심각



2002년 대선 때 “반미면 어떡냐”며 호기롭게 말한 노무현은 집권하자마자 파병을 추진했다



사진(노동자연대) 제공



사진(출처:대통령기록사진)



사진(노동자연대) 제공

노무현 정부는 '국익'을 이유로 침략 전쟁에 파병을 했지만, 김선일 씨 같은 평범한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 없었다

하게 동요한 유일한 때는 2003년 3월 이었는데, 그것은 노무현을 대선에서 지지한 광범한 청년층의 표심(이듬해 총선에서)을 의식해서였다.

그러나 2003년 4월 2일 노무현은 직접 헬기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국회 의원들을 압박했고 국회는 결국 파병을 통과시켰다. 2004년 전투병 파병 후에도 국회는 매해 이라크 자이툰 부대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에 동의했다.

은근히 기대를 걸었던 노무현 정부가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 파병을 강행하자 반전운동은 더 분노하고 급진적이 되는 게 아니라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멸과 좌절감을 느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독립적이지 못했던 노선의 귀결이었다.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

반전 운동이 사그라든 데에는 한반도 평화에 초점을 맞추려는 협소한 관점도 작용했다. 반미를 핵심 강령으로 하는 자민통계는 당시 반전 운동에 늦게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동의 초점을 이라크가 아니라 한반도로 돌리려고 시도했다.

사실 2003년 4월 바그다드가 함락되자 자민통과 참여연대는 마치 기다렸

는 듯이 이라크 반전 운동을 접으려 했다. 결국 이들은 열의 있는 반전 활동가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당시 반전 연대체를 해산시켜 버렸다.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를 처음부터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전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세력은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곧 시작될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에 따라 추가 파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예측은 옳았음이 2003년 가을에 입증됐다. 미국의 점령에 맞서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시작됐고 다급해진 부시는 한국 정부에 추가 파병을 요구했다. 팔레스타인 제2차 인티파다 3주년인 2003년 9월 27일 국제공동행동부터 2004년 여름 자이툰 부대 파병 전까지 다시 한국 반전 운동이 불붙었다. 제국주의의 역학에 대한 분석, 국제주의적 시각과 전망의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다.

자민통과 참여연대는 다시 부랴부랴 연대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실천은 필자가 위에서 서술한 대로였다.

당시 운동에서 간과된 한 가지 돌아볼 문제는 노동계급의 구실이다. 제국주의가 자본주의라는 경쟁적 축적 체제에서 비롯하는 만큼, 반제국주의 투

쟁에서 노동계급의 구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당시 조직 노동자들의 반전 운동 동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2003년 3월 국회 앞 시위 등에 동원하고, 항공조종사노조가 김선일 씨 피랍 때 파병 운송 거부를 선언하거나, 서울지하철노조가 반전 운동을 지원(후원금과 역사 내 반전 포스터 광고와 방송 협조 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합원 동원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그저 '다함께' 노동자 회원들이 일터에서 모임 등을 꾸려서 동료들을 반

전 운동에 끌어들이는 성과를 낸 작은 사례는 있었다. 극소수 활동가라도 때로는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핏 보여 준 사례다.

트럼프가 이란에서 전쟁을 벌이고 한국 정부가 파병을 논의하는 지금, 지난번 한국 반전 운동의 교훈을 되짚어 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의 관점, 민주당을 비롯한 온건 진보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태도, 노동계급을 동참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를 굳건히 밀고 나갈 혁명적 세력의 역할이 그 교훈이다.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부산/울산

중동에서의 제국주의와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일시 3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부산 하이스퀘어 5층 QSM강의실 (서면역 1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영익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공저자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부산/울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28-8029 / busan-ulsan@ws.or.kr

서울

전쟁 동참하라는 미국: 트럼프와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

일시 4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 전문통역사의 영어-아랍어 동시통역 제공

장소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2층 토포즈홀 (서울역 11번 출구)

발제 김하영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공저자

참가비 6,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한국군 파병 논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대안은 부적절하다

이재혁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시민연론 민들레>(이하 <민들레>)에 기고한 3월 17일 자 칼럼에서 윗게도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파병의 대안으로 문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전개’”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를 예시로 제시했다. 마치 그 일이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는 명백히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었다.(2020년 1월 21일 발표된 노동자연대의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를 보시오.)

김 전 의원 스스로도 당시 정의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파병”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 ... 독자적인 임무 수행이라고 강조하나 ... [미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순수한 독자적 임무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2020년 1월 21일)

3월 1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 참가단체·개인들도 “청해 부대 품수 파병”을 윗게 반대했고, 정의당도 이에 동참했다. 김 전 의원의 주장은 정의당의 현재 당론과도 맞지 않는다.

걸프국들에 ‘방어 무기’ 지원?

둘째, 김 전 의원은 “이 위기는 한국에 새로운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기회를 동시에 열어 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의 우호국들은 자국 방어를 위한 무기 수요에 목말라 있다. 이들에게 공격 무기가 아닌 천궁·신궁 같은 방어 체계를 적극 제공하는 전략적 공세를 취할 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고가 소진되어 가는 지금, 한국이 중동의 방어 솔루션 허브이자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선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그것은 전장에 군함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국익의 증진이다.”

그러나 친미 걸프 군주국들로 ‘방어용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뒷받침하고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확산 위험에 일조하는 일이다.(관련 기사: 본지 577호, ‘천궁-2 UAE 수출을 계기로 본다: 자본주의하에서 무기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좌파 정당 소속 정치인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전쟁을 “경제적 기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고, 현재 정의당 한반도평화위

원장이다.

김 전 의원의 주장은 국익론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 국익(실체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이다)을 강조하면, 이재명 정부의 무기 수출이나 군비 증강, 미국 패권 전략 지원 등을 일관되게 반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심지어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

3월 23일 현재까지 정의당 내에서 김 전 의원의 <민들레> 칼럼을 비판한 것은 아직 찾을 수 없다.

사실 정의당 중앙당은 현재 걸프국 무기 지원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정의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 김 전 의원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다.

정의당 좌파인 전환의 웹진 《도모》는 지난해 5월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반대하며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 전면 금지”를 주장했다. 3월 19일에는 이란 전쟁을 한국 방산의 기회로 여기는 한국 언론들을 비판한 재한 이란인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교수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이런 윗게 비판이 당 중앙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이 친미 걸프국들의 “무기 공급선”이 되어서 안 된다

‘중견국 연대’가 트럼프에 맞설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최근 ‘규칙 기반 질서’의 붕괴와 경제적·지정학적 불안정 심화 속에서 ‘중견국 연대’가 대안이라는 주장이 떠올랐다. 특히,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캐나다 총리 카니가 “중견국”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연설한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

한편, 트럼프의 포식성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 속에 좌파들 사이에서도 ‘중견국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민들레> 칼럼에서 “지금이야말로 ‘중견국 연대’를 결집할 역사적 기회”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협력 대상으로 꼽았다.

<민플러스>는 미국 패권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촉구한 이경렬 전 앵글라 대사(필명 이창천)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전 대사는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뜯기고 있다는 불쾌감”을 주는 상황에서 “카니 총리의 중

견국 연합 구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김 전 의원과 이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패권 전략에 협력하는 것을 윗게도 꾸준히 비판하고 반대해 왔다. ‘중견국 연대’ 주장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중견국 연대 노선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우선, 이른바 “중견국”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중간 이상 규모의 국가들을 가리키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등 기존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 한국,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국들까지 중견국으로 포괄된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처럼 한때 세계 패권을 두고 세계대전까지 벌였으며 지금도 제국주의 강대국들이나 국가들과 한국 등이 함께 중견국으로 묶이는 것은 어불성설이



사진 출처: 캐나다 총리실

캐나다 총리 카니가 말하는 중견국 연대는 중견 지배계급들 간 연대다

국가들 간 연대에 기댈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참여성 있게 건설하자

지난해 카니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에어캐나다 노동자들과 우체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격했고,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 카니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북아메리카 선주민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막대한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 노동계급 복지에 쓸 수도 있는 예산을 감축하고,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카니 정부는 트럼프의 횡포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한 배에 탄 캐나다인들'이라는 애국주의를 강화하면서 위와 같은 일들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카니는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의 GDP 성장률이 G7에서 1등이라고 자랑했지만, 지난해 1분기 캐나다의 최고 소득 가구와 최저 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였다.

카니 정부가 트럼프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캐나다 노동계급의 삶과 안전이 아니라 캐나다 자본가 계급의 이익이다. 카니가 말하는 중견국 연대는 중견국 지배계급 간 연대다. 다른 중견국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카니의 발언은 트럼프의 포식성 제국주의와 동맹국 압박이 기존 동맹 관계에 긴장과 균열을 자아내는 한 사례다.

동상이몽

중견국으로 불리는 국가들도 자본의 국제적 경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지속적 협력이 쉽지 않다. 그나마 그것을 묶어 주고 조율했던 것이 미국 지도하의 제국주의 질서였는데, 바로 지금 미국 스

로 그 약화를 승인하고 있다.

중견국 연대를 말하는 사람들도 중견국들 간 신뢰가 관건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미국 패권에 맞설 대안으로 주목받은 브릭스 국가들만 하더라도 여러 사안에서 동상이몽인 경우가 많다.

한편, 좌파가 단기적으로 중견국 연대를 추구한다면, 당장에는 그것을 수행할 주체인 이재명 정부를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설득·견인해야 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한 배를 탄 세력으로 여기는 민족(애국)주의를 강화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협력하는 한편, 그것을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기회로 삼고 있다. 한국 지배계급의 전통적 성장 전략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트럼프의 이란 전쟁에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를 전쟁 반대, 파병 반대 문제에서 협력할 수 있는 주체로 생각하면 방향 감각을 완전 상실하는 것이다. 설득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런 기초의 운동은 대중의 저항을 '탈동원'해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강행하면 혼란과 사기저하를 겪게 된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직후 딱 그랬다.

대중 투쟁이 정권을 독립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벌어지면, 운동을 이끄는 좌파들 자신이 애초에 투쟁을 자기제한적으로 이끌게 마련이다.

또, 진정한 행위주체가 돼야 할 노동계급의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조심스러워지게 된다. 청와대와 여당을 국익을 고리로 설득하려 할 것이므로, 투쟁 주체와 방법뿐 아니라 표방하는 구호와 이데올로기도 불필요하게 온건해지기 쉽다. 그런 '탈급진화'로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지금 진보당은 이런 특유의 이층 전략을 구현하고 있다. 전쟁 반대와 파병 반대를 내건 연합 운동체를 만들고 대중 집회를 시작했다. 동시에, 조국혁

▶ 10면으로 이어짐

다. 캐나다만 해도 G7의 일원이다. 그들은 제국주의 위계 질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더 높다. 즉, 그들도 오늘날 세계적 지정학 위기의 공범들이다. 영·프·독은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제국주의간 대리전을 벌이고 있고, 일본도 중국을 겨냥해 막대한 군비 증강을 하며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캐나다

그보다 하위의 나라들을 보자면,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벌인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을 막으려고 중견국 정부들이 한 구실은 거의 없다. 몇몇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전쟁범죄(제노사이드)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상징적인 행위 말고는 말이다.

미국을 뺀 강대국들과 한국 등 친서방 '중견국'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패권 질서에 오히려 협력해 왔다는 사실일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위한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고, 22일 캐나다가 속한 나토는 "나토 회원국과 일본, 한국, 호주 등 22개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모인다"고 발표했다.

카니는 중견국 연대를 연설한 다보스 포럼 불과 두 달 만에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했다. 19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유로 이란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에 동참했다(이재명 정부도 동참했다).

물론 캐나다는 트럼프의 압박을 받고 있고, 카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다 트럼프로부터 미국에 합병 시키겠다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카니 정부가 트럼프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캐나다 지배계급의 이익이다.

혐오표현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국가 규제에 기대서는 안 된다

근래 몇 년 새 혐오표현 규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현재까지는 모두 철화·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시도했고, 정의당과 진보당도 차별금지법 계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윤후덕 등이 대표적이고, 진보당은 손솔이 대표적이다.

규제 방식이 넓고 추상적일수록, 특히 형사처벌을 도입할수록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커진다. 표현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덜 침해하는 것은 폭력 선동, 진정한 협박, 반복적 표적 괴롭힘처럼 해악이 구체적인 경우를 좁게 규제하는 입법이다.

반대로 '모욕', '적의', '정신적 고통', '배제·제한을 담은 게시물' 같은 개념을 넓게 써서 일반 정치표현까지 끌어들이는 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크고, 동시에 활동가·소수와 시위까지 압박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후덕안과 신장식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실질적 위험성이 크다.

물론 극우의 혐오표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무례한 언사가 아니다. 특정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며, 그들이 사회에서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다.

혐오표현은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사람들을 모욕하고 굴욕감을 주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사적인 편견의 독백이 아니라, 상대에게 들리고 보이도록 던져지는 공격적 표현이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 규제가 적절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쟁점이 드러난다. 혐



국가의 규제 권한은 극우의 혐오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운동을 겨눌 수도 있다

오표현이 해롭다는 사실과, 국가가 그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전자는 사회적 해악에 대한 판단이고, 후자는 국가 권력의 역할에 대한 판단이다. 둘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혐오표현 규제에 신중한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하나는 혐오표현에 맞서는 더 나은 방식이 반론과 공개적 맞대응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더 많은 금지가 쉬워진다는 점이다. 우리는 혐오표현 금지가 더 광범한 검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오늘은 극단적 혐오를 막는다고 시작한 규제가 내일은 더 광범한 표현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성격

이 우려는 결코 공상적이지 않다. 국가는 언제나 '해로운 말'만 정교하게 골라서 통제하는 중립적 기계 장치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법은 문장으로 쓰이지만, 그 문장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경찰, 검찰, 법원, 행정부 같은 국가 기관과 이른바 '여론 주도층'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긴다.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선동'이며 무엇이 '사회 질서 위협'인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이 결정은 결코 순수하게 중립적일 수 없다.

그래서 좌파가 혐오표현을 반대하면서도 국가 규제에는 신중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관된 태도다.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다. 그러나 국가의 규제 권한도 늘 소수자 보호만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는다. 오늘은 극우의 노골적 모욕을 겨냥한 법이 내일은 소수자의 분노, 저항하는 사람들의 급진적 구호, 반전 운동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언어, 체제를 비판하는 말들을 겨눌 수 있다. 규제의 칼은 한 번 쥐어지면 극우만 베고 멈추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마음에 드는 의견만 허용하는 체제가 아니다. 혐오스럽고 어리석은 견해를 가진 사람조차 시민으로서 발언할 권리가 있다. 국가가 어떤 의견은 너무 불쾌하거나 해롭다고 해서 공론장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시민을 동등한 정치적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일이 된다. 이 문제는 혐오표현 규제 유혹이 왜 민주주의 자체와 긴장을 빚는지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정부가 안보나 외교 같은 다른 가치들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경향을 우려의 눈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본지의 관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문제는 단지 검열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만도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애초에 중립적 심판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현실의 국가는 기존 질서와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수호하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규제 권한은 추상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대체로 아래를 향해 행사된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부당하게 비하되는 사람들,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쉽게 '문제적' 표현이 된다.

바로 그래서 혐오표현과 맞서는 좌파의 과제는 국가에 금지 권한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그것을 정치적으로 분쇄하는 데 있다. 혐오표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조직된 연대로 맞서고, 거리와 학교와 직장 문화의 공간에서 그것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검열이 아니라 투쟁이다. 필요한 것은 침묵의 강요가 아니라 집단적 반격이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극우의 혐오표현은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응을 국가 규제 입법에 맡기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부를 수 있다. 혐오를 막겠다며 국가에 쥐여 준 권한은 종종 차별과 억압 받는 사람들과 급진적인 저항을 향해 되돌아온다. 그래서 혐오표현 반대와 국가 규제 반대는 모순이 아니다. 그것은 혐오의 해악과 국가 권력의 위험을 동시에 보려는 태도다.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9면에서 이어짐

신당 등과 함께 국회에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고 정부·여당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운동이 중도 정당들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으면, 대중 동원이 정부 설득용에 머물 위험이 있다.

정의당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군

사적 지원 일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김종대 전 의원의 군사 지원 입장이 당 방침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좌파 측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좌파 일각에서 중견국 연대가 대안이라는 주장은 진영론의 변형으

로,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등 미국에 맞선 '국가들 간 협력·연대'를 추구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주의 원리와 정면 배치된다. 국가들 간 연대에 기댈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국제주의 관점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참을성 있게 건설해야 한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긴급 중동에서의 제국주의,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내란 청산' 지지 여론이 여전함을 보여 주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와중에 깊어가는 가자지구·서안지구의 고통

이스라엘이 중동 곳곳으로 테러를 확대하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여전히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

2월 말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이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하루에 대략 10번 꼴로 공격해 최소 16명을 죽였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휴전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완화시킬 것으로 표방됐다. 휴전안 대로라면 가자지구-이집트 국경에 있는 라파흐 검문소는 식량과 생필품을 들고 위급한 환자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개방됐어야 했다. 병원 운영도 재개됐어야 했다.

가자지구 데이르 알발라에 피란해 있는 팔레스타인인 언론인 알리아 씨는 그중 무엇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지에 전했다.

“식량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 물자가 시장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생필품의 반입을 일부 또는 전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천천히 기아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채소와 과일이 있지만 턱없이 비쌉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비싸서 살 수 없어요. 조리가 가능한 급식소가 거의 모두 멈췄어요. 식재료가 없거든요.

“라파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검문소를 제대로 개방할 거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35만 명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2만 명이 치료가 시급하다.

이스라엘이 라파흐 검문소를 통제하고 있는 탓에 가자지구 주민 절반



서안지구 이스라엘 검문소. 서안지구 전체를 거대한 구금시설처럼 만들기 위해 설치됐다

이상이 기본적 의약품도 구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보건 시설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 때문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데이르 알발라의 알아크사 병원과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이 운영 중이고 알시파 병원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리아 씨는 전했다.

“장비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환자를 신속하게 전원시킬 수도 없어요. 이곳 의료 상황은 늘상 매우 열악합니다.”

의약품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도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란 미사일의 날카로운 파편 때문에 네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서안지구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여전히 극렬 시온주의 정착자들의 격화되는 공격이다.

헤브론 남쪽의 마사페르 야타에 사

는 마흐무드 씨는 서안지구에서 “정착자들의 공격이 급격하고 위협하게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에도 정착자들은 나블루스 남쪽 쿠스라에서 팔레스타인인 한 명, 나블루스에서 세 명을 살해했다. 그중 투바스의 탐문 마을에서 벌어진 공격은 특히 잔혹했는데, 어린이 두 명과 부모들이 살해당했다.

마흐무드 씨는 이렇게 전했다. “그 공격은 매우 끔찍했어요. 참극이었습니다.”

마흐무드 씨는 나블루스의 두마 지역과 투바스, 요르단계곡에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피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공격들은 모두 C구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두 정착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려는 목적에서 벌인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사라진 땅을 원합니다. 자신이 통제하는 C구역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C구역은 이스라엘 민간 당국과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곳입니다. 하지

만 이제 둘 모두 정착자들의 공격을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하는 정착자를 가로막으면 이내 경찰이 와서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합니다. 지난주 수사에서 한 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정착자를 저지하려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마흐무드 씨는 밤마다 동네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땅과 시설을 불태우려는 정착자들에 맞서 경계를 선다고 전했다.

“저희 팔레스타인인들은 매일 밤 스스로를 지키려 애씁니다. 사람들이 뭉치면 정착자들이 마을 전체를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정착자들이 왔을 때 경찰을 불러도 경찰은 곧바로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일부러 녹장을 부려요. 그래서 땅을 지키기 더 어렵습니다.”

가자지구처럼 다른 곳에서도 이스라엘의 테러 때문에 고통이 더 깊어진 것이다.

마흐무드 씨는 이렇게 전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요. 이스라엘에 직장이 있던 사람들도 직장이 사라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세입을 압수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당국(PA)은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앞날이 어떨지인데, 미래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아서 타우넨드

출처 Arthur Townend, 'Israel wants a land without people': Palestinians in the West Bank and Gaza speak out' (2026. 3. 19) / 번역 김준호

▶ 12면에서 이어짐

처럼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일을 지금 7개 국가가 한 것인데, 한국 정부가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한국 정부는 파병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군사적인 지원은 아닐 거야’ 하며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 고삐를 조이면서 계속해

서 항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팔연교는 이런 항의 목소리를 모아 내기 위해 ‘이란 전쟁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교사 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서명을 모아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3월 29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전국 집중 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에 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교사 참가

단도 꾸릴 계획이다.


“3월 29일 집회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의 날’ 기념인 동시에 집회의 핵심 기조로 이란 전쟁 반대와 한국군 파병하지 말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 대열을 이뤄서 직접 만든 팻말과 현수막 등을 들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이나 학교, 아니면 교사들이 속한

모임에 공동참가단 모집 링크를 공유해 주시고 또 참가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반대 / 한국군 파병 반대 교사 서명



3.29 전국 행동의 날 교사 참가단 모집





3.29 트럼프·네타나후 전쟁 반대 집중 행동의 날 참가 호소



전체 호소 보기

김산 연세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알라 연세' 회원 “많은 대학생들이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합니다”

우리 '알라 연세'는 연세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의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들과 협력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을 때 '알라 연세'는 규탄 성명을 바로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파병 요구가 처음 있을 때, 대학의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들이 연합한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네트워크'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배제한 채 강대국들의 협상이나 외세 개입으로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수 없듯이, 이란의 해방은 이란 민중의 손으로 이뤄야지 미국의 폭격이나 외세 개입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관심은 개전 초기보다 확실히 커진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파병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를 호소하면서 학교에서 유인물을 나눠 줬는데, 20분 만에 유인물 350부가 동났습니다. 집회 참가까지 함께한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파병을 요구받고, 경제적으로도 체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인 만큼 청년들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파병 반대나 전쟁 확산 반대라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많이들 동의해 주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원초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미국과 미국 패권의 일부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한국 정부의 이란 규탄은 오히려 미국을 고무시키고, 만약 미국의 자본주의적 패권이 유지된다면 다른 곳에서 똑같이 행패를 부릴 수 있게 되고, 세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추종해왔고, '국익'과 '실리'를 말하지만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꼭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으로 인한 생계비 인상 등으로 고통받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이란에서 피를 흘리는 것도 평범한 사람들, 팔레스타인 등 제국주의의 최전방에서 희생되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국가나 민족의 장벽을 넘습니다.

이번 학기 동아리 신입회원이 20명 가까이 되는데, 미국 등 서구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트럼프 반대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각성한 학생들이 한국에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 가고 싶어서 우리 동아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억압자들은 언제나 하나로 뭉쳐 있고, 여러 억압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 세계의 민중인 우리도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합니다.

조수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 공동운영진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3.29 교사 참가단에 함께합시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교)은 미국의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팔연교 공동운영진인 조수진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초등학교가 폭격당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미국이 쏜 미사일에 희생됐다는 점에서 말이예요.

“전쟁이 터진 날에 전교조 대의원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팔연교 선생님들은 트럼프의 가자 '평화위원회'를 폭로하는 입장을 선생님들께 나눠 주러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 폭격 소식을 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팔연교 공동운영진 선생님들과 상의해 규탄 입장을 내기로 정했습니다.

“저는 전교조 대의원이기도 해서, 기타 안건으로 전교조 차원에서 규탄 입장을 내자고 제안했고, 본부 검토를 거쳐 전교조도 3월 4일 규탄 입장을 냈습니다.”

조수진 교사는 학교에서도 이란 전쟁의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

“수업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의 학생들을 추모하는 활동에 관심 있어요?' 하고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 호응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학기 초에는 교사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계획서도 써야 되고,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담임으로서 각종 상담도 해야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열정적인데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이 점심시간 동안 진행한 추모 메시지 쓰기 활동에는 150명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다.

“활동 결과를 전교조 활동가 500여 명이 속한 채팅방에 올렸더니, 평소에는 반응하지 않던 선생님들까지 호응해 주셨어요. 제게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분도 계셨고, 미나브 초등학교 학생들을 생각하며 독서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도 새로 알게 됐어요.”

팔연교는 반전평화 계기수업도 준비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리한 수업자료도 만들어 공유할 계획이다.

조수진 교사는 한국 정부가 영국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란 규탄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에 크게 분노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이 위선자들!'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는 비판하면서도 미나브 초등학교에서 희생된 어린 초등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 한마디 없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말은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벌이는 이란 전쟁이 마치 정상적인 것

▶ 11면으로 이어짐

평의 날 50주년 3.29 전국 집중 행동의 날

트럼프·네타나후의 전쟁에 반대한다!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이란 공격 멈춰라! **3월 29일(일) 오후 2시**

중동에서 손 떼라! 전쟁 지원 말라! **서울 열린송원복지광장 입구** (안국역 1번 출구)

○ 아침에 일어 봉역 제공
○ 집회 후 미국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 앞 행진